

## 에너지고효율 아파트 인센티브 에너지소비총량제 10월 공공기관 시범도입 후 내년 의무화



오는 9월부터 에너지효율등급을 높여 설계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층고와 용적을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또 2010년부터는 대형 건물을 지을 때 연간에너지소비총량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에너지총량제가 도입되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가산비에 에너지항목의 비중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지난달 2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형 건축물에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시범 도입한 후 내년 말부터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9월부터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높이와 용적률도 완화해줄기로 하고, 이 완화안을 2009년부터 상업용 건축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성능항목을 표시해야 하는 주택도 현행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분양가 가산비 인정시 에너지항목 비중도 기존 11%에서 14~15%로 확대된다. 또 임대산업용지는 신재생에너지산업과 탄소저감형 기업에

우선 공급되고 교통분야 온실가스 종합감축을 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2008년 하반기부터 경유화물차를 LNG화물차로 전환할 경우 대당 2000만원의 전환비용을 지원하고, 부두의 갠트리 크레인을 연료비 80% 절감이 가능한 전기동력형으로 전환할 경우 내년부터 비용도 지원한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교통량 감축을 위한 수요관리정책도 강화된다. 혼잡통행료의 부과단위·금액 등 기준을 개선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실효성도 높인다. 에너지가 절약되는 운전습관과 차량관리방법 등 에코드라이브(Eco-Drive) 운동도 펼쳐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2015년까지 전국 23개 맴의 치수능력 보강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화호 조력발전소도 2010년부터 전면 가동해 연간 900억원의 유류비와 34만의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발전소·제철소 등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CO<sub>2</sub>)를 해양퇴적층에 저장해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기술(carbon capture & storage)도 정부·민간의 협력을 통해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해조류·해양미생물을 이용한 CO<sub>2</sub> 흡수기술을 상용화해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서 UN 인증도 획득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은 범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된 것으로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수송 등 분야의 온실가스를 적극 감축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고유가시대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식경제부 연구인력 필요한 기업 "지원하세요"

정부가 올 하반기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에 62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식경제부는 중소기업의 R&D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이공계 석·박사와 대기업 퇴직 기술인력을 연구인력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의 올 하반기

62억4000만원 규모의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종업원수가 5인 이상이고, 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 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에 고급 연구인력 고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R&D 역량

강화와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중소기업은 3년 간 석사 3600만원, 박사 4500만원, 산업체 퇴직 기술인력 48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지원은 기업당 3명까지 가능하다.

지경부에 따르면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R&D 인력부족율은 7.1%로 사무직 부족율 3.7%보다 매우 높은 실정이다. 또 그로 인해 중소기업은 제품개발 등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술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고급 연구인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후기 석·박사학위 이수자와 산업체 퇴직인력을 중소기업이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하반기 이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급연구인력과 중소기업은 모집 공고에 명시된 접수기간 내 연구인력중개 알선센터(www.mdjob.com)에 접속·등록하고 상호 검색·협의를 거쳐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중소기업에서 고용지원 신청서를 오는 9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고용지원금은 선정평가를 실시한 후 선정 10월부터 지급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대기업 퇴직기술인력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대기업에서 쌓은 노하우를 지방 중소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 2004년 처음 시작됐으며 지난해까지 총 300억원이 투입돼 1812개 중소기업에 지원된 2098명의 석박사급 연구인력이 고용

## 서울시

### 2008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용자금 지원계획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최근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해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용자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대상사업은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에 한다. 에너지 절감 및 이용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개선을 위해 ESCO와 계약을 체결한 서울시 소재 민간건축물로 건물 소유자 또는 건물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 ESCO사업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용자금 지원금액은 한도가 사업금액의 80% 이내(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잔액금액의 80% 이내)이다.

용자 조건은 용자 이율 연리 3% 이내이며 민간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시범대상일 경우 연리 1.5% 적용한다. 용자기간 및 상환조건은 5년 이내거치 10년 이내 균등 분할상

환으로 올해 용자규모는 50억원이다(용자 취급은행: 서울시 금고(우리은행))

용자 승인신청을 위한 신청 등 절차는 대행이 가능하며 용자 승인신청 후 용자사업으로 결정이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용자금 신청 및 상환방법 등 제반 사항은 용자 취급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심의를 거쳐 사업결정을 할 수도 있다. 또 당초 사업내용 중 시설내역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에 대한 내용을 서울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오는 12월 31일 까지이며 서울시 에너지정책담당관에 방문접수해야 한다.

용자 승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문의: 02)2115-7721, 7722).

된 바 있다. 이중 2855건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1300건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등 중소기업의 R&D 역량 강화에 기여한 바 있다.

### 세라믹메탈할라이트 램프시스템 에너지합리화자금 지원대상 추가

2008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

지침에 따라 세라믹메탈할라이트 램프시스템이 지원대상 신규설비로 추가됐다. 시행일은 올해 7월 2일 계약 분부터 지원된다.

용량 150W 이상인 램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에 한하며, 150W 미만인 램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 인증을 득한 것으로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시험방법은 고효

## 대한주택공사 에너지초절약형 공동주택 시범사업 착수

주공이 에너지를 40%이상 줄일 수 있는 에너지초절약형 공동주택모델 개발에 성공하고 본격적인 보급에 나섰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는 고층 아파트를 대상으로 그 동안 개발된 에너지절약 기술을 집대성한 모델 개발에 성공하고 의정부 민락지구에서 오는 2012년 5월 준공목표로 시범 단지 설계를 시작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주공에 따르면 단열부분에서 벽체에 사용되는 50mm 단열재가 80mm로 바뀌고 개구부에는 고성능 창문이 설치돼 단열성능이 30% 이상 향상된다. 또 홈 네트워크에 유비쿼터 기능을 접목시켜 난방구간별로 시간대를 나눠 자동제어 난방에너지를 25%정도까지 감소시킨다.

이밖에도 부대시설에 태양열 급탕과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스템, 옥

상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건설해 공용공간에 전기를 공급한다.

주공관계자는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의 요소기술 중 단열강화부분을 모든 분양주택에 바로 적용해 1등급 설계로 전환하는 설계방침 수립을 완료했으며 연차계획으로 2009년 40%, 2010년에는 50%이상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내부목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2009년에는 가구당 연간 전체 난방비의 40%에 해당하는 26~38만원의 난방비 절감이 가능하고 연간 10만세대 적용시 총 절감액이 260~380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공은 이번 에너지절약 시범사업과 별도로 이 사업에 적용된 요소기술을 다른 분양주택에 조기 확대 적용해 에너지성능을 1등급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활환경을 갖췄다.

올에너지기자재인증 기술기준 중 베탈할라이드램프의 경우에 준함) 광효율 85(lm/W) 이상인 것에 한한다.

단, 안정기와 반사각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삼성전기 美와 LED특허분쟁 사전 예방

삼성전기가 미국 콜롬비아대학 로스

차일드 명예교수와 발광다이오드(LED) 특허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로스차일드 교수는 자신이 가진 LED 특허 무단 사용을 이유로 지난 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전 세계 34개 전자회사들을 제소했다.

삼성전기는 직접제소를 받지 않았지만 향후 미국시장에 LED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 특허 사용계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현재 국내외 약 2000여건의 LED관련 특허를 출원, 등록된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R&D투자로 칩과 형광체, 제조공정 등 핵심분야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타 업체와 기술 제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1년부터 본격적인 LED사업을 시작한 삼성전기는 차별화된 독자구조의 청색 LED칩 개발에 성공했고, 2004년 독일 오스람사와 백색 LED의 생산과 판매에 관한 특허 사용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 정부 신재생E 국산화 1944억원 투입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국산화와 차세대 및 혁신기술 개발을 위해 대규모 정책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28일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재생에너지를 신성장동력과 수출산업으로 집중 육성키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계획을 접수받아 지난해 보다 60%증가한 194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할 기술개발 대상 분야는 전략기술개발과 고효율·저비용 혁신기술개발, 핵심 부품·소재 및 장비·설비 국산화 개발 등이다.

분야별로는 국산화 개발의 경우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 장비 국산화 ▲150μm급 실리콘 태양전지 모듈 제조 장비 국산화 ▲1kW급 가정용 연료전지 부품·소재 국산화가 진행되며,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유기

성 태양전지 상용화 개발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 ▲비식용 홍조류를 활용한 바이오에탄올 개발 등이다.

또 고효율·저비용 혁신기술개발을 위해서는 ▲2MW급 서풍속 직접구동형 풍력발전 시스템 개발 ▲수문부착형 5~10kW급 소수력 발전시스템 개발 ▲300kW급 고정식 수평형 조류발전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지경부는 이를 통해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이용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4대 분야의 경우 중대형 전략기술개발과 원천기술개발 등을 통해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바이오, 폐기물, 태양열, 지열, 소수력, 해양분야는 단기 상용화 위주의 핵심기술 및 실증연구를 추진해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단기간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주관 과제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를 유치한 과제에 대해서만 지원함으로써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보다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국내외 시장 환경과 기술수준, 특허분석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R&D과제를 공고해 다수의 연구팀의 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

#### 여름철 'CO<sub>2</sub> 줄이기 나부터' 캠페인 전개

환경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행락인파가 밀집하는 전국 주요 국립공원, 고속도로 휴게소, 해수욕장에서

#### 지식경제부

#### 8월부터 전차종 CO<sub>2</sub> 배출정보 표시



8월부터 출고되는 모든 자동차에 이산화탄소(CO<sub>2</sub>) 배출정보 표시가 의무화 된다.

지식경제부는 8월 1일부터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저탄소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함께 '탄소배출정보표시(탄소라벨링)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이후부터 생산된 자동차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연비와 함께 1km를 운행할 때 배출하는 CO<sub>2</sub>양을 g단위로 표시해야 한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전 제품에도 이산화탄소 배출 정보가

'CO<sub>2</sub> 줄이기 나부터'를 주제로 홍보 캠페인을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철 무더운 날씨로 에어컨 사용이 증가 하고 휴가 시즌의 차량 정체를 에너지소비자가 더 많아지는 것을 감안해 생활속의 에너지·자원 절약을 통해 국민의 '온실가스 줄이기' 참여를 높이고자 시행했다.

대상지역은 휴가인파가 밀집되는 국

표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는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 등 에너지사용기자재에도 효율표시와 CO<sub>2</sub>배출량을 함께 표시토록 할 예정이며, 이후 업계의 기대수준과 국제 표준화 동향 등을 살펴가며 표시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존의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에 CO<sub>2</sub>배출정보를 함께 표시하는 탄소배출정보표시제도의 시행으로 소비자가 쉽고 편리하게 경제적이고 탄소배출이 적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별도로 탄소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업계의 부담을 덜 수 있고 각종 다양한 마크, 라벨의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 방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 14일부터 생산되는 모든 차량에 CO<sub>2</sub>배출정보를 표시하고 있고 르노삼성은 지난 1일부터 QM5 모델에 적용하고 있다.

립공원(북한산, 설악산, 지리산, 변산반도, 속리산), 고속도로 휴게소(망향, 여주, 행담도), 해수욕장(대전, 해운대, 경포대, 명사십리) 등 12개 지역이다.

환경부는 이번 캠페인에서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온실가스를 줄이는 생활의 지혜' 실천수칙을 담은 놀이용 튜브, 병입수돗물, 리플렛 등과 같은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